

의안 검토 보고

의안 번호	제 227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1. 10. 18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시군구행정조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납부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)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, 발행기관명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2항)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3항)

2. 검토결과

- ☐ 본 조례안은 민원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청구증명에서 다양한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무인민원증명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납부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□ 주요내용은
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추가하는 내용임. (안 제3조제1, 2, 3항)

□ 검토의견

- 위 내용을 검토한바
 -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,
 -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 (2000. 12)에 따라 우리구에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우선 설치(소요액: 53백만원중 국비 1천만원 포함)하고 시험 가동후(시험설치장소:민원여권과, 서초1동 민원실) 2002. 1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발급대상은 토지대장등 6종이나 추후 32종으로 확대 예정이며, 민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임.
- 위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.
 - 조례 제4조제1항중 “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”을 “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”으로 수정하고,
 - 동조 제3항의 “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, 과, 보건소, 등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”를 “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, 과, 보건소, 등에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”로 수정하며,
 - 동조 제4항중 “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”을 “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”으로 수정,

- 동조 제5항중 “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해”를 “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”로 수정
- 제9조중 “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”를 “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”로 수정
- 제11조중 “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”를 “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”로 수정

3. 참고자료

□ 관련법령
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

[관련법령]

<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>

제11조의2(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)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)을 접수·처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(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. [개정 2001·2·14]

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·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④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.

⑤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,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0·10·13]